

## 문광부, 옛 도청별관 연결통로案 거부 표전당 제3 대안 곧 발표

### 이번주 광주시와 협의... 또다른 진통 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옛 전남도청 별관 보존과 관련 '30m 보존 방안'이나 '연결통로 방안'이 아닌 새로운 제3안을 이번 주 내 제시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 문제부의 안인 '30m 보존 방안'보다 진전됐지만, '연결통로 방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19일 "옛 전남도청 별관에 대한 최종 보존방안을 마련해 이번 주 광주시민을 대표하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설계자인 우규승씨와 이미 협의를 끝내고 문제부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상 문제부 최종안이라는 점에서 2년 여를 끌어온 옛 도청 별관 문제가 마무리될 지 여부에 지역민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역 내 진보단체들로 구성된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와 광

주시가 애초 합의해 문제부에 전달한 '연결통로 방안'은 사실상 거부됐다. 문제부가 옛 도청 별관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구조보강 후에도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통로의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되는 별관 30m는 상징적인 건축물로 보존하고, 본관과 부분보존되는 별관 사이 24m를 연결하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 관계자는 "제3안에 대해서 광주시에 전달하고 지역 내 논의 등 절차를 거쳐 공개될 것"이라며 "광주시와 지역사회가 별관과 본관의 연계성을 강조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에는 강 시장과 나주시 반남면 신촌리에서 열린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기공식에 참석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따로 만나 제3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광주시는

이달 내로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3안의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옛 도청 별관 보존방안에 대해 지역 내 의견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해결 실마리를 찾기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문제부가 애초 옛 도청 별관 54m 가운데 24m를 철거하고 30m를 부분보존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광주시 등이 철거 건물 4층 부분을 연결통로로 남겨두자는 수정안을 건의해 돈데다 최근에는 연결통로 방안에 합의했던 시도민대책위가 원형 보존을 주장하고 나섰다 때문이다. 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5·18단체 및 진보단체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하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형 강 시장은 지난 17일 '공동체 원탁회의'를 개최하면서 ▲지역 내 갈등 및 대립 지양 ▲5월 정선 및 가처 최대환 반영 ▲문화전당건립 사업 조속 재개 등을 옛 도청 별관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당은 19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손학규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당직자와 당원 3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날치기 4대 강 예산·MB악법 원천무효, 이명박 독재 심판 광주·전남 규탄결의대회'를 가졌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공안통치 멈추고 ‘형님 예산’ 환수하라”

### 민주당·민노당 주말휴일 광주서 정부·여당 강력 규탄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에 맞서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민주당과 민노당 등이 주말과 휴일인 18일과 19일 광주에서 대 여(與)·대 정부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19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도청 앞 광장에서 '날치기 4대 강 예산·MB악법 원천무효 이명박 독재 심판 광주·전남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MB독재 심판, 민주주의 회복 ▲4대 강 예산 폐기, 민생예산 원상복귀 ▲특혜 예산 몰수, '형님 예산' 환수 등을 주장하며 대 정부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여갔다.

특히 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와 군의 연평도 사격훈련 강행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대결·강경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미국에 대해선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손학규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라며 "연평도 사격 훈련을 중지할 것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정권에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북한은 3대 세습을 하고 주민이 굶어 죽어도 핵개발을 하는 비정상 국가로, 비정상 국가에 합리적 판단을 요구해선 안 된다"며 "이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이 땅을 안

보 정국으로 몰아넣고 긴장조성을 통해 공안통치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집권하면 한반도를 전쟁터가 아닌 평화의 지역으로, 서해 5도는 군사요새가 아닌 남북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또 "12·8 국회 날치기 예산 통과를 서민층을 짓밟고 특권층만 위한 것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고동안 숨겨온 독재를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야당 연대 및 민주세력과 손잡고 2012년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 정부 탈환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오후 광주 박지원 원내대표를 "국민의 정부, YMCA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4대강

참여정부가 이어온 햇볕정책으로 한반도 평화가 10년간 이어졌는데,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평화가 전쟁위협으로 바뀌었다"라며 "야권연대를 통해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 잃어버린 '평화'와 '예산'을 되찾아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정권 수뇌부가 '전쟁을 각오해야 평화는 온다'는 막말을 하고 있다"며 "MB정부는 북한과 대화를 할 용기를 가져야 하고, 참여정부와 국민의 정부가 쌓아올린 평화를 계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8일 오후 광주 YMCA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4대강

예산·날치기 법안 원천 무효'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광주 동구 충장로 옛 광주우체국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민주노동당도 19일 오전 11시 이영희 대표와 박정숙 국회의원, 윤민호 광주시장 위원장 등 당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MB 독재 심판을 위한 광주 시민 보고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 형님 예산, 영부인 예산을 밀어붙이기 위해 민생·복지 예산을 삭감 잘라냈다"며 "국회가 더는 한나라당 마음대로, 청와대 예산만 뽑아서 통과시키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軍 “이르면 오늘 연평도 사격훈련”

### 北 '자위적 타격' 경고 속 한반도 긴장 고조

군당국이 기상여건을 고려해 20~21일 예정대로 연평도에서 해상사격 훈련을 강행한다는 입장인데 북한도 '자위적 타격'을 경고하고 나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최근 한반도 긴장 사태와 관련해 19일 새벽(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4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해상사격훈련과 관련, "반드시 쓴다. 날치기 관련이다"면서 "조선시대처럼 우리 국력이 약할 때는 강대국이 한마디

하런 영향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런 나라가 아니다"면서 훈련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군 당국에 따르면 연평도 해병부대의 해상사격훈련은 20~21일 사이에 기상조건이 좋은 하루를 잡아 가로 40km, 세로 20km의 연평도 서남방 방향의 우리 해역에서 실시된다. 사격훈련에는 K-9 자주포와 105mm 견인포, 발칸포, 81mm 박격포 등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20여 명이 참여해 통제·통신·의료지원 임무를

수행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및 유엔사 회관국 대표 등 9명도 훈련에 참관한다.

군은 또 북의 추가도발을 위해 의료진 비상 대기태세 유지와 함께 공군 F-15K 및 KF-16 전투기 기지에 비상출격 태세를 유지토록 했다. 아울러 정부와 연평도 사격훈련 계획을 지난 16일 미·중·일·러 등 한반도 주변 4강(強)에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담화에서 "남조선 괴뢰들이 포 사격을 강행해 금지선을 넘어서는 경우 조선반도 정세의 폭발과 그에 따르는 참화는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북장성급회담 북측 단장은 지난 17일 남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훈련 강행 시 "영해를 고수하기 위해 2차, 3차의 예상할 수 없는 자위적 타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연평도 사격훈련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19일 오전 11시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출발 2010, 제2의 창학원년

**학교설립 56주년 (1954~2010)**  
56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정식 모집 **12월 17일~22일**  
대입원인 학부 (062)605-1114  
보육교사교육원 **12월 1일~1월 7일**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키스해링 지상전** ▶아이콘(63.5×53.5cm·실크스크린·1990년작)

서명에 즐겨 사용...순수·젊음 상징

키스 해링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인 '아이콘' 시리즈로, 지하철 낙서화를 그리던 당시 서명(署名)으로 즐겨 사용했던 이미지다. 일명 '빛나는 아기'로 유명한 이 작품은 시인 트네 리카르드가 명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아기는 유약한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함과 젊음, 에너지와 능력을 의미한다.

'팝아트 슈퍼스타, 키스 해링전'은 내년 2월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에서 계속된다. (062)613-5396

## 더 큰 대한민국, 큰 기회 잘 살리겠습니다

# 한미 FTA로 대한민국 '경제영토'가 세계 최대로 넓어집니다

- 미국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한 '퍼주기식 협상' 아닌가요?  
**한미 FTA는 양국 모두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win-win 협정입니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적절히 감안하면서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냈으며 돼지고기, 의약품, 미국내 우리 근로자 비자연장 등 여타 분야에서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안보와 경제를 맞바꾼 '정치적 빅딜' 아닌가요?  
**정부는 철두철미하게 경제통상의 관점에서 이익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가 강화되고 이는 결과적으로 양국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게 될 것입니다.
- "쇠고기 이면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인가요?  
**쇠고기는 논의되지 않았으며 합의된 문서 어디에도 쇠고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자동차에 대한 추가협상으로 한미 FTA 효과가 크게 반감된 것 아닌가요?  
**그간 불확실했던 한미 FTA 발효 시기를 앞당겨, 경쟁국보다 먼저 미국시장에 진출하는 유리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자동차 관세 철폐기간이 다소 연장되었으나 우리 자동차의 높은 경쟁력과 현지생산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세는 즉시 철폐가 유지되는 만큼, 자동차 부품분야에 중시하는 우리 중소기업에 큰 혜택이 기대됩니다.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양국 자동차산업분야의 공동발전과 교역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한국자동차공업협회(12. 5)-
- 자동차 특별 세이프가드는 독소조항 아닌가요?  
**전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된 사례는 없습니다.**  
발동요건이 까다로운데 최근 우리 기업의 현지생산 증가 추세를 볼 때, 실제 발동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발동할 수 있으며 만약 발동된다 하더라도 원래 관세(우리측 8%, 미국 2.5%)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유럽연합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없나요?  
**정부는 사전에 EU로부터 예상되는 반응을 고려하면서 협상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EU가 관심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CO2)연비기준은 한미 FTA와는 관계없는 별개의 사안입니다.